

# 김승수 전주시장, 독거노인 겨울나기 현장 방문

### 현장 찾아 새해 인사 전해...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 점검 "최상의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해 나갈 것"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5일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겨울나기 현장을 방문해 새해 인사를 했다.

김 시장은 이날 완산구 노송동에 거주 중인 김 모 할머니(76세)와 덕진구 진북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할머니(81세)를 찾아 함께 겨울을 나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생활실태를 눈으로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노송동 김 할머니는 "코로나19가 길어져 지칠 때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해주는 도시락 배달과 생활지원사의 안부전화 등으로 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추위 속에서도 방문해 따뜻한 격려를 해줘 큰 힘이 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김 시장은 4년차로 접어들어 탄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점검했다.

지난 2019년 완산구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전주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전주 전역에서 노인과 장애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5일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겨울나기 현장을 방문해 새해 인사를 했다.

인, 정신질환자 2440여 명을 대상으로 약 지원 △맞춤형 방문 운동지도 △통합인자훈련 △응급 간병 지원 △영양

더하기 △케어안심주택 △주거환경 개선 △건강관 질병예방 사업 등 30여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대상자들의 입원비와 의료비를 줄여주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도출하면서 정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향후 시는 사업을 고도화·융합화하고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해 전주형 통합돌봄 모델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날 독거노인 방문을 시작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아동 등 가정과 생활시설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을 향한 복지는 대상에 따른 맞춤형 설계와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집에서 편안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상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역사박물관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최근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자료의 공동 학술연구를 완료하고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痕跡(흔적)'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다.

##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흔적

### 전주역사박물관·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도서 발간

전주역사박물관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유재은)는 최근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자료의 공동 학술연구를 완료하고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痕跡(흔적)'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도서 발간은 지난 7월 전주역사박물관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체결한 '전주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 도서에는 전주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 기록 사진부터 일본인 농장과 관련된 도서, 설계도, 지적도, 문서 등이 수록돼 전북지역 일본인 지주 농장과 수탈의 역사에 대해 알려준다.

세부적으로 1부의 경우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을 지원한 관공서와 농장사무소 등 기록 사진 위주

로 수록됐으며, 2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일본인 소유 농장에 대한 역사가 기술됐다. 3~4부의 경우에는 일본인 지주 농장과 관련된 도서, 농장 건축물 설계도, 지적·지적도, 문서, 교량 설계도 등이 담겼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들은 전북지역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계획 수립과 유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도서에 수록된 유물들은 올 하반기 전주역사박물관 기획전시를 통해 선을 보인다.

전주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고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진행됐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공동 학술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구직자 신규 채용 기업에 월 70만원 지원

### 전주시, 14일까지 청년취업 2000 사업·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전주시가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청년취업 2000 사업'과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들은 각각 만 18~39세 청년

과 만 40~69세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월 70만 원씩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은 20명, 신중년은 27명 채용이 목표다.

시는 또 사업에 참여하는 취업자가 장기 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청년에게는 최대 300만 원, 신중년에는 최대 200만 원의 취업장려

금을 별도로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전주지역의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채용 계획이 있으며 최저 시급 이상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일

자리청년정책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6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청년취업 2000 사업의 경우 청년협력팀(063-281-2543)으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일자리창업지원팀(063-281-2555)으로 하면 된다.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주시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SW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오는 17일까지 '2022~23년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22~2023년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은 지역의 SW 관련 강소·초기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비 208억 원 등 총 41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SW서

비스사업화 △지역선도기업사업화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지역SW서비스사업화 분야는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 SW융합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품질관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지역선도기업사업화 분야의 경우 지역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SW기업들을 대상으로 핵심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자 일자리 창출, 기업 성장, 기술사업화에 대한 제품 고도화 및 성능테스트 등을 지원해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를 돕는다. 지역현안 해결형 SW개발 분야는 산업혁신, 정주여건 개선, 갈등해결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W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 및 현장적용을 통한 사업화를 목표로 한다.

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SW서비스사업화 분야 3개 과제, 지역선도기업사업화 분야 3개 과제,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 분야 1개 과제를 선정한 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되는 기

업은 오는 3월 말부터 2023년까지 SW 제품개발, SW품질관리, 국내외마케팅, 제품 사업화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전주시와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인 SW분야에서 지역 기업들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며 "발굴된 SW기업들이 지역 산업 및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안서 접수는 14~17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가동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농촌지역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3월까지 13곳의 농촌동 일대에서 농정·환경·산림부서가 참여하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볏짚·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나 폐비닐·폐농약 용기 등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영농부산물 등을 적치해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나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용

로 예상되는 페드럼통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계도에 나서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했다.

시는 또 농업인 교육을 진행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토지자원 및 재활용을 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농기계 지원 및 임대사업 우선 참여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보릿짚과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은 잘게 분쇄해 퇴비화해야 하며 폐비닐, 부직포와 같은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